

第225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12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견
-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 3. 2002년도예산안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4.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나. 사학진흥기금

審査된案件

-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견 ..... 1
-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 2
- 3. 2002년도예산안 ..... 2
  -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4.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 2
  -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나. 사학진흥기금

(10시25분 개의)

○委員長 李揆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金漢根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최근 교육계는 상당히 많은 현안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중

지를 모으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목소리가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집행태도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심사할 안건이 내년도 교육예산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처한 교육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정책적 방향을 알려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재정적 표시인 교육예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으로서도 온 국민이 교육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진솔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견

(10시30분)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李在五 위원님과 任鍾哲 위원님 대신에 曹正茂 위원님과 金花中 위원님을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맡아왔습니다만 최근 회부되는 청원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57조에 의거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 소위원으로서는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 金貞淑 위원, 朴昌達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金德圭 위원, 金花中 위원, 田溶鶴 위원으로 하고 黃祐呂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하기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2002년도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 4.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보고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나. 사학진흥기금

(10시32분)

○委員長 李揆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계획과 사학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존경하는 李揆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225회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부의 교육인적자원정책에 대해 사려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초·중등교육정책 등과 관련하여 교원단체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이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온정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개혁은 더욱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학생수업료 5% 인상 등 금년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1121억 원이 증가된 4조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7422억 원이 증가된 22조 3250억 원이며 당초예산으로 대비할 경우 11.5%에 해당하는 2조 30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우리 부가 추진할 주요시책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다양한 소질·적성개발 및 창의력 신장 등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내실화, 공교육기반 구축, 유아·특수교육지원, 교원 처우 개선 등에 68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내년에 시 지역 1학년부터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2004년까지 완결하고

전국 저소득층 만5세아에 대한 학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화·특성화하는 데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문 보호·육성에 100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대 육성에 500억 원을 지원하며 국립대 교수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등 총 1조 40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체제구축과 모든 국민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열린학습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졸업자 취업 DB구축에 5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계학원 수강료 용자이차보전 등 평생교육 진흥에 금년보다 122% 증가한 59억을 지원하는 등 총 19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계 고교의 체제개편과 특성화·내실화에 508억 원을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다양화·특성화에 856억 원을 증액지원하는 등 총 24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초·중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과 7·20 교육여건 개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금년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4940억 원이 증가된 18조 70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당초예산으로 대비할 경우 12.4%에 해당하는 2조 580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섯째, 교원·학생 등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2단계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해 7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은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

리 부소관 공공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소관의 공공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2년도 총 운용규모는 4조 1993억 원으로 이는 2001년도 계획대비 19.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張乙炳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입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張乙炳 지난 9월27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취임한 張乙炳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基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李基雨입니다.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안규모, 분야별 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4조 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2341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5% 정도를 인상하여 17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3년간 20%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안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추후에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4% 즉 7422억 원이 증가한 22조 3250억 원입니다. 그러나 당

초예산으로 대비할 때는 11.5%가 증가한 즉 2조 30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로 볼 때 내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모두 28조 157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를 대비하는 경우에는 4.73%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실장, 예산은 다른 문제와 달리 좀더 심도있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때 보고와 틀려요. 구령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항목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001년예산 17조 7860억이 18조 4463억 원으로 늘어나서 6603억 원이 증가해 3.7%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국고는 당초 3조 1945억 원에서 3조 4548억 원으로 이 속에는 인건비, 기본운영비, 주요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14조 5915억 원에서 14조 9915억 원으로 2.7%인 40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7967억 원에서 3조 8786억 원으로 81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는 3950억 원에서 4130억 원으로 17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교육기반확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가 포함이 되어 60억에서 183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4%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경쟁력강화에 있어서는 1조 3092억 원에서 1조 4072억 원으로 97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대학연구능력 활성화 중 지방대 육성 50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1651억 원에서 1913억 원으로 26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15.8%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학연계 직업교육 충실은 2345억 원에서 2446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정보화 추진지원은 748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이 신규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는 내년에 947억 원이 늘어난 1조 2827억 원으로 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추진 중 먼저 기초학력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이 116억 원에서 68억 5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수 학습활동 지원이 42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여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3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해당 학년의 약 1%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는 전 학년에 대해서 표집평가로 한 1000개 학교의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중등학교의 영어 등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3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개혁 추진 홍보 등에 1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의성·지도성 및 봉사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표창하도록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에서도 1964년도부터 시행하는 유사한 대통령 장학생제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기반확대입니다.

먼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2678억 원이 증액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 2002년도에 시지역 1학년 그리고 2003년도에 시지역 2학년까지, 2004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 중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해 오던 수업료 및 입학금 그리고 교과서대금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내년도에는 2678억 원을, 2003년도에는 5328억 원을, 2004년도에는 7993억 원을 정부에서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계상하고 2005년 이

후의 의무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은 올해 60억에서 183억 원으로 3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아를 전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국가가 50%, 지방에서 50% 부담하도록 하고 법정 및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방식은 학부모가 자녀를 취원시키는 유치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이 40%, 보건복지부소관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참고로 월평균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의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올해와 같이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교육자료 개발 및 자원 봉사자 교육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2000년 3월에 개교한 한국우진특수학교 운영비에 5억 1200만 원, 국립특수교육원 지원에 6억 원 또 신규로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로 36억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는 전공과 및 고등부 이료재활과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해당액의 50%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2003년도에 나머지가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첫째,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 개선에 583억 원이 봉급교부금 및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증원은 내년도에 1만 1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247억 원이 계상되었고 교원 처우 개선으로 현재 월 8만 원씩 주고 있는 담임수당을 내년에 10만 원으로 하는 데 필요한 295억 원과 보직수당 월 5만 원을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3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중등교원 국외연수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사도장학금 지원에 22억 원이 계상되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지원은 37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먼저 지식·정보기반사회 대비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위해서 올해 1700억 원에서 143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0년도 예산 계상액 2000억 중에서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168억 원과 서울대학교 전용기숙사가 500억 원입니다마는 100억 원만 내년에 계상하고 400억 원은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악구청과 서울대학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예산당국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구조 조정 및 교원 성과급 지원에 600억 원입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에 9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 원이 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12개의 지방대학 중에서 저희들 예산산출 기초로 사용한 것은 25개 대학으로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씩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3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평소에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기초학문 지원을 위한 예산 100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 백신연구소 설립·운영 지원도 140억 원이 계상되었고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비 보조를 위해서 38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국립대학교 교수 증원 1000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64억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단체 지원에 19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회의의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대학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국·공·사립대학의 시설·설비 확충에 137억 원, 사학진흥기금 지원에 300억 원이 재특회계로 되어

있고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에 1137억 원, 고전국역, 한국사 편찬 및 한국역사 정보화 구축에 68억 원, 대학입학제도 홍보 및 대학생 학·예술활동 지원에 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립대학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립교육기관 시설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363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에 2608억 원, 대학이전에 7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공주대 산업과학대 이전, 금오공대 이전, 밀양대 이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립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32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국립대학의 입시경비 및 학위논문 심사비 160억 4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시경비 요구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0년도에는 60% 또 올해의 경우에는 70%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내년에 85% 정도로 끌어 올렸습니다.

13쪽의 국립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지원에 763억 원입니다. 그 중 서울대분당병원 건립에 658억 원입니다. 서울대 소아진료부 확충에 25억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센터 확충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1일자로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노후의료장비 대체 등에 투자된 차관원리금 상환에 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합리화 유도를 위해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할 예정입니다.

대학병원 신설지원에 265억 원입니다. 강원대병원 그다음에 제주대병원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고 전남대 화순병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1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의 종합정책 추진에 6억 원, 미래사회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영재교육에 3억 5900만 원이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정책연구 개발에 12억 59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졸업자 취업 DB 구축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업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이 인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졸업자 취업통계정보를 DB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 및 발간·보급에 14억 원, 여성교육정책 개발 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에서 평생교육백서 발간 및 주부교실 지원에 9800만 원, 노인교육, 문하생 학력인정 등 지원에 4억 7400만 원, 평생교육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학원이나 도서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13만 4167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40개 있고 해당 학생이 1만 4718명인데 그 중 직장인이 50%이고 전업주부가 20%, 기타가 3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력인정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기술계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를 융자해 주고 이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3만 정도 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기술계 학원이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장기교습자가 3만 2975명 정도 되는데 기술계 학원에 수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필요한 수강료를 융자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외동포 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제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지원을 위해 2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치민 한국학교에 6억 9500만 원, 상해 한국학교에 2억 2600만 원 등 제외 한국학교 신축 지원에도 9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3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8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학 수지 적자가 2000년 기준으로 한 8억 2400만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진흥원 지원에 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를 위해 2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국가에서 학비를 연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대학에서 학

비를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에 183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위해 186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35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학생 중식 지원을 위해 569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용자에 7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력인정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의 PC보급 및 인터넷 사용료 226억 원, 이것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 연계 직업교육 충실입니다.

고교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50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교육 희망자 위탁교육에 10억 원, 농어촌 실업고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에 농특회계로 27억 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을 중추적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에 16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는 데 13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공업계전문대학을 선정 지원하는 데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비 지원에 따르는 경비로 65억 원, 실업고등학교와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직업 기술인력 양성에 40억 원,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0억 원, 전문대 우수연구소에 첨단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에 올해와 같은 수준의 24억 원, 국립전문대학 운영비로 30억 원, 국립특수전문대학 개교에 필요한 경비로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 3월1일자로 평택에 개교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은 모두 10개 학과로 525명의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보조로 4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추진 지원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의 정보화 지원에 172억 원, 대학교육의 정보화 지원에 210억 원, 교육학술정보망 등 구축 운영에 35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육정보화 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당초 예산 대비 2조 580억 원이 증가하여 18조 709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 저소득층 학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수업료 결손보전, 지방교육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18조 7099억 원은 전액 시·도교육청에 배정되어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개 시·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추진을 위해 20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연구용역에 10억 원, 민간단체 지원에 9억 2700만 원, 운영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5쪽 이후의 세부 사업별 내역은 조금 전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조달 계획은 자체세입 1조 7250억 원, 정부지원금 5586억 원, 여유자금 회수 1조 6729억 원 등 총 4조 58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0.8%가 늘어난 수준이며 운용계획은 연금급여, 후생복지 등 사업비에 1조 2778억 원, 예치금 등 자금운용에 2조 7536억 원, 기금관리에 27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조달 계획은 재정특별회계 예수금 300억 원, 기금운용 수익금 403억 원, 용자금 회수 701억 원 등 1404억 원으로 금년 대비 8.5%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것은 재정용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300억 원으로 줄어든 까닭입니다.

운용계획은 시설자금용자에 1000억 원, 재특예수

금원리금 상환에 325억 원, 일반관리비에 17억 원, 자금운용 등에 6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尙元鍾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2002회계연도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5% 인상하고 있는바 이는 2002년도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여 지적을 받아오던 수입 대체경비의 경우도 대학의 요구액 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2001년 70%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세입 예산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도 교육부문의 주요사업으로 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교직원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추진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에만 5조 6461억 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우 부실공사 및 교원충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즉, 현재의 교원양성체제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교직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교원 충원으로 교원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교원 충원이 학급증설과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지 않은바 교원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급증설은 실질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지 못하고 재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둘째, 2002년부터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무상의무교육계획은 교육에 있

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로 국가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만을 부담하고 교원의 봉급에 대하여는 현재의 재원분담방식을 2004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이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요예산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재원분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이 조기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구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인적자원정책국이 설치됨으로써 국 단위 소관사업예산이 처음 편성되었는데 예산액은 전체 교육예산 중 0.03%에 미달하는 규모이지만 향후 이 부문의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심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방향 제시가 요청되며 연내에 확정 발표될 중장기 인적자원정책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종료 전에 별도의 보고를 통한 정책방향 타당성 검토가 국회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준비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체계적 준비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대학교육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조성사업비 항목에서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지원목적으로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대학다양화·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 5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그동안 BK21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인문학 등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적었던 기초학문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한바 이 경우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액



사업 집행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사전변경 또는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명분으로 집행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예산심의 시 이 사업예산에 대한 명확한 용도와 기준을 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평생교육지원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대 다양화·특성화사업은 금년까지 특성화 지원사업 및 구조조정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던 사업방식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의 통합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방식이 전문대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지원이 아니라 매년 단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차제에 단년도 위주 및 각 전문대의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규교육으로부터 탈락된 청소년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맞추어 넓은 의미의 대안교육체제로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섯째, 소외계층 기회보장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저소득층자녀유치원학비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수교육시설에 대한 확충 및 재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 추진 주요사업의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에 추진하기로 공표한 주요사업은 총 14건에 6조 41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고에서 확보된 예산은 전체의 17.6%인 1조 1268억 원이며 지방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이 80.9%인 5조 1913억 원이고 나머지 1.5%인 995억 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시행 주체에게 예산확보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직원전종합방안, 기타 중요

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기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순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15분입니다. 오늘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昌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관계부처 식구들 오랜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요즘 교육관련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부총리 이하 식구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예산관련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신규사업은 총 12건, 소요예산액은 2867억입니다. 이 중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한 소요예산은 2678억 원에 이르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신규사업예산의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중학교무상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2001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진행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 교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주무부처에서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갖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갖고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朴昌達 委員 그러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사업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작년 7월25일 저희 한나라당 鄭寅鳳 의원에 의해서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고 지난해 10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시에 교육부가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조기 확대 실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5일 국회 교육위의 법률안심사시 대체토론 과정에서 존경하옵는 여당위원들께서는 원칙적 취지는 공감하나 국가재정 여건상 2002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교육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6일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金相權 차관은 기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확대 실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정부나 여당위원 모두가 2002년도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확대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업을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난 2001년1월18일에 전임 李敦熙 장관은 민생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적 결단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장관, 차관 모두가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확대 실시에 대해서 국가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셨고 본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 소속 모든 위원들에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갑자기 변경하여 조기실시함에 있어서 당시의 교육부장관은 물론이고 차관, 교육부관리들로부터 본 위원은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조간신문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정책이 변경되고 결정되면 관계행정부처는 입법부에 알려주고 그것을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 절차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가교육정책 몇 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내년 예산을 국회에 와서 심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임장관과 차관이 모두 교체된 상황이지만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金大中 대통령께 국가재정여건상 조기확대 실시의 불가함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金大中 대통령께서 통치자적 결단에 따라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라고 지시한다면 그토록 반대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 그것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2002년도 신규사업 중에는 소요예산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10억 원, 왜곡교과서 오류시정을 위한 민간단체를 위해 9억 2700만 원, 기관운영비 등 일반경비 7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연구용역은 일본, 북한 등 교과서 분석연구에 4억 6000만 원, 군대위안부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에 1억 7000만 원, 일본 역사교육단체와 교과서 공동연구에 7500만 원, 한국이해자료 개발·보급 및 역사왜곡대응 학술대회 지원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 사업내역 중에는 인터넷 한국관련 오류시정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VANK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3개 단체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20억 원 중 19억 2700만 원이 외부연구용역과 민간단체의 지원비입니다.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1982년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이외의 외국 역사교과서에 실린 한국관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주위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터넷에서 한국관련 오류사실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이트 VANK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VANK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잘못 기재된 사실은 교과서에 잘못 기재된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의 사실오류 시정을 위한 민간단체에는 2억 원씩 지원하면서도 친일과 인명사건을 편찬하기 위해 몇 년씩 고생하고 있는 민간단체에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교과

서에 한 줄도 실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미국 8월 26일자 LA타임즈지 서울발 기사에서 일본교과서만 왜곡된 것이 아니다, 한국역사교과서도 왜곡되어 있다,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한국도 역사의 일면을 애써 외면하는 선택적 망각증에 걸렸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학자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인 친일과 인명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시민모금을 통해 어렵게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朴昌達 委員 유독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세기의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친일역사의 청산을 위한 사업에는 무관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친일과 인명사전 편찬과 같은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기구에서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단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친일과 인명사전 편찬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액을 신규계상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기초학문연구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3년간 3000억 원을 지원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학문연구비 지원예산 1000억에 대한 배정기준 및 지원대상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책정되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지원견해를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문연구비 지원예산 1000억 원을 책정한 근거와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사무보조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총 1755억 원을 투입해서 1만 500명의 인원을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원 사무보조인력의 자격과 선발기준 또한 이들이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교원 사무보조인력 1만 500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교원 부족대책하고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이라는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내용하고 대학수능제도의 난이도 조정문제, 대학졸업생의 취업대책문제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 委員 金德圭 위원입니다.

먼저 7차 교육과정 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서 교과교실 및 다목적교실을 대량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각종 시설확충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 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시설확대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사업과는 달리 장기간의 일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년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교수 증원 문제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대학 교육여건을 볼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교수 선발의 평가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청의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선발 기준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밝혀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학문 연구비 지원은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와 병행해서 기존의 응용과학 위주의 대학교육도 보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문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응용학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문과 사회수요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기초학문이든 응용학문이든 사회에 배출된 졸업생은 별도의 교육훈련을 장시간 받아야만 직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현실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문연구비 지원예산 1000억 원에 대한 배경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즉 집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에 3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원 장기 해외유학, 장단기 해외체험연수, 민간기업체 교원파견 등의 사업들의 경우 교원의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소요예산 중에서 일부는 예산에 반영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연수나 휴직할 교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교원수급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하에서 이런 사업들의 추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 확보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교육개혁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교육개혁 추진사업은 2001년 예산에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교원성과급,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2년 예산안에는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사업, 교원성과급 지급사업으로 편성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선도적인 개혁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인 2000년의 국립대 구조조정사업 결산을 보면 10개 국립대에 128억 원이 지원되어서 당초 지원액 150억 원 중 2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학별로 평균 12억 8000만 원씩 지원한 셈이라서 실질적으로 대학재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학의 자율적 내부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학내부의 갈등과 반발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대 발전계획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성과급 문제입니다마는 대학교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성과급 지급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초·중등 교원에 대한 성과급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과급 규모가 교수들의 연구활동의 촉매제가 될 정도로 적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성과급을 주는 사전작업으로서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지원의 차등지원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용자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금년보다 40%가 감소한 3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용자특별회계 용자금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연간 170억 내지 180억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서 지난 98년에 206억 원 그리고 99년 151억 원 그리고 지난 해 176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지원규모를 축소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도부터 연차별 재특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아직까지 용자금의 배정 금액이 신청금액의 평균 36.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대책 없이 재특용자금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립학교 시설자금 용자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재특용자금 축소에 따른 사립학교시설자금에 대한 용자사업의 위축이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학진흥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재특용자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립학교의 시설자금으로 용자하는 단일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이 일정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재특용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립학교시설자금 용자활동을 위축시켜서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요청되고 지원방법도 재특용자금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보다 상환부담이 없는 출연금 형태로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학진흥기금 사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용자사업이기 때문에 용자를 받는 재단의 신청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고려할 때 기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2002년도 교육부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4%가 늘었지만 GNP 대비 6% 확보를 약속했던 金

대통령의 공약과는 거리가 먼 4.73%로서 결국은 金 대통령 임기 내에 6%를 확보하겠다고 한 선거 공약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은 지금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겨냥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공약과 정책이 교육 현장의 피폐와 혼란을 야기하였음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이 아닌 거리로 나가고 있고 예비교사들도 교사임용시험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하고 거리로 나가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이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해서 거리로 나설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정말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어찌다 이 모양으로 되어서 온 국민이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우울한 교육현실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공약과 정책으로 인한 교육붕괴의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문회 개최와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서 책임자 규명에 대한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교육예산의 GNP 대비 6% 확보를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에게 무수히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를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원 확충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화가 나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교사집단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원정년단축을 교사들과 합의 없이 무 자르듯이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제 부랴부랴 수급정책을 다시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원수급 정책에 지금 교사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까지도 교육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들을 좀 많이…… 지금 한 2만여 명이 다시 들어와 있지요? 현 정부 들어서 나간 교원들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명퇴교

사들 돈 주느라고 한 4조 5000억 정도 빚을 저 가지고 있고 지방채도 가지고 있고 책임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들 내 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모자라고 지자체가 빚을 몽땅 저버리고 재정도 파탄이 난 것이지요. 지금 2만여 명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 교원정년단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1만 1451 명을 또 2년 동안 받아들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반발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이 분들을 모자라니까 불러들인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또 중·초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대생들이 데모하니까 이것을 철회하고 학사편입제도로 2년간 2500명을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교대 3학년 학생수가 470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20%는 원래 학사편입으로 뽑게 되어 있는 숫자인데 그게 940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2500명을 추가하면 73%가 넘는 3440명이 정규 외 편입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교사로 양성해야 되는데 시설이 충분히 됩니까? 또 교수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엉터리 교사들을 양산하는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질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저질교육을 낳고 저질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시켜서 국가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인데 계속 악수만 두면서 교육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교원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저질 교사나 양산해서 국가 장래를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십 몇 조 예산 통과 해 주면 뭐해요, 계속해서 이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사양성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숫자논리로 대충 맞추어 놓으려고 그래요. 교육대학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실시하려고 계속 유도하고 숫자 채우기에만 열중한 현재의 교원수급 정책을 계속 밀고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교원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파탄이 나면…… 지금 교원정책이 잘못되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7차 교육과정 평계를 대면서 이것으로 뒤덮어놨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상 7차 교육과정 실시를 위해서는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론 필요하겠지

요.

그러나 문제는 교원정년 단축, 이것은 실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단축시키든지 명퇴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것을 좀 유도해 가지고 설득해서 수급조절을 합리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놓고 엉망이 되니까 7·20 교육과정을 터트린 거예요. 교육정책 다 실패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빗발치니까 이름을 바꿔 버렸어요. 문패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 전체를 평생교육체제로 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몰두하겠다고 이러면서 혼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원정책이 잘못되니까 7·20 교육여건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학급당 인원수 줄이니까 교사가 모자라다, 물론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호도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정책이에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을 연기하시고 서서히 안정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못하는데 학급당 학생수가 한두 명 많으면 어떻습니까? 교육의 질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질이 중요합니다. 7차 교육과정,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교원정년 환원하십시오.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대 편입학제는 적정규모로 교대, 지금 현재 교사양성기관에서 자신 있게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늘려 나가고 우수한 기간제 교사가 있으면 채용하는 등 이런 몇 가지의 컨센서스를 당사자들과 합의한 다음 이뤄 가면서 해야 반발이 줄어들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쯤 대학입시에 불평을 갖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거리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 내년과 내후년에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튀어나올텐데 어떻게 수습하실 작정입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교원수급정책의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학수능시험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정말 일관성 없는 대학입학시험정책에 대해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픔입니다. 작년에 박도순 교육평가원장이 쉽게 내겠다고 그랬어요. 변별력을 더 낮춰서 쉽게 내겠다, 작년에는 쉽게 내겠다고

그래놓고 너무 쉬우니까 안희수 수능시험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험의 생명은 변별력이다, 어렵게 내겠다고 그랬어요.

李海瓚 전 교육부장관은 특기적성 하나만 잘 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수능시험 어렵게 내면 과외가 성행하니까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별 의미 없이 쉽게 내겠다고 계속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아이가 고3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망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킵니다. 아무리 엄마가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네 반에서 성적 좋고 학교 내신성적, 학교성적 부풀리기 위해서 전부 '수' 맞고 하니까 아이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2시30분에 막 보내 버려요. 공부 안 시켰습니다. 사교육비 올라간다고 과외도 안 시켰어요.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고 학교, 교육정책을 믿고 따랐던 아이들은 이번에 다 망해 버렸어요.

우선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작년 아이들하고 금년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향평준화 되어 버렸다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50점 차이가 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아이들하고 재수생이 몽땅 들어와 있는데 금년 아이들하고…… 금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석차 순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석차 순으로 들어가니까 점수가 낮아도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작년 아이들한테, 재수생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 아이들은 내년에 재수해도 불리하게 되고 내년 아이들은 또 공부 열심히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李海瓚, 소위 1세대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부총리,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대학입시정책, 그 아이가 전국 수준에서 어디쯤 있는지 모의고사 한 번 못 보게 하는 이 정책, 모의고사 보면 사교육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못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육평가원장, 오늘 여기 안 나온 것 같은데 묻고 싶어요. 출제위원단에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반 이상 넣어 주든지 아니면 전문학원 강사들을 넣어주든지 해야 돌아가는 현실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수들한테만 다 맡겨 가지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지금 울고불고 온 나라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원 정책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억 정도를 받았습시다. 금년에는 더 내려가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22조 원의 0.05%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는데 이 돈이 3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깎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 내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여학생 직업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대졸 미취업 여성의 전략직종 분야로의 전환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등 하여튼 전체적으로 초·중등에서 대학까지의 교육내용 중 양성평등에 대한 성 인식 관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연구비와 개발비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업도 몇 개 들어가는 돈이고…… 그런데 벼룩의 간을 내먹지 작년에 22조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성과 관련하여 말로만 여성 우대한다고 하면서 이 정부가 떠들썩하게 여성부 만들어놓고 돈 200억 주고 여성부라고 합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자원, 평생교육에 여성인력 개발 등등 이렇게 운운하면서 지금 3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부가 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에다가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계속 해서 2억, 3억씩 매해…… 과학기술부는 2002년에 26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적은 돈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과기부에다 빼앗기고 있는데 영재교육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의도입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부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과학영재고등학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초·중학교 영재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년대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다가 그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교원 연수시간 연장 및 자격연수 강화 등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교사들의 훈련 문제, 대학강사 처우 문제,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추진 문제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새천년민주당 李在禎입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융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4년8월1일 제정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에 의해 사업초기인 94년도에 100억 원,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해서 총 2100억 원을 학술진흥재단에 출연하여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아주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한 학기에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100만 원, 2001년부터 150만 원에 불과해서 사실 이것이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학자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사립대학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등록금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더라도 또 다른 데에서 역시 융자를 받거나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지급수준을 차라리 국립대와 사립대를 차별화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가능성은 없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융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술진흥재단이 지급하는 융자금이 원래 농특세에 의해서 2000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출연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180억 원, 내년 예산은 15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역시 더욱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인적자원개발 부문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인적자원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은 교육훈련·과학기술·문화정책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지식기반 경제에 대비한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략을 포괄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을 해 나간다고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올해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소관사업으로 63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63억 원의 편성내용과 앞으로 이것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연구개발비 예산이 2001년도 48억 9600만 원보다 2002년도 예산에는 7% 증가된 52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편성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이외에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상보조를 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또는 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주어 수행하는 연구개발, 지방교육재정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등 여러 경로의 개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로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인해서 혹시 중복지원이라든가 또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런 연구수행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본부 차원에서 연구발주라든가 그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수합하여 중복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기초학문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학자들에게는 대단한 낭보입니다. 1000억 원을 지원해서 기초학문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민의 정부가 학문발전을 위해서 놀라운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위원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단기성 위주의 진흥책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러한 연구가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민간보조금 형태의 단발성 예산이 아니라 학술진흥법을 개정해서 기금조성을 통한 법적 여건을 만들어 가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한시적 목적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80년도에 해직된 대학교수들에게 국민화합 및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지침을 마련해서 2002년도 예산에 국립대 교수 10명, 사립대 교수 66명의 해직기간 보수에 대한 보상을 위해 82억 54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않은 기획예산처의 사유를 보면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타 분야, 해직언론인 등등의 보상요구가 예상되어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92명 중 전남대학과 전북대학 교수 16명에게는 약 12억 원을 지급하고 타지역 대학 76명에게만 아직 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분들이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실 참 어렵게 어렵게 교사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수업시간도 많고 환경도 열악한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남다른 처우개선이 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과도한 수업시수, 업무부담들을 조절해주는 의미에서 과도기적으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겠는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한 액수이고 현재 예산여건상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한번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하시면서 초등학교원 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과밀학급 등으로 인해 수업 등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국립대학교수를 1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서 국립대학교에 굉장한 격려가 되고 교육여건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1000명의 증원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또다시 일반 국립대학에만 치중되고 가령 산업대학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의 산업대학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고려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이 된다는가 배정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차제에 산업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립대학 교원 증원을 산업대학에 좀더 배정할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물론 금년도부터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 자체에 대한 지원이 작년 18억에서 금년에 17억 원으로 1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이것을 가급적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1세기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 金貞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셨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가가 요구하는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2학년·3학년 학생들에게 선택적인 과목을 택하게 함으로써 잠재력을 키우고 본인의 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는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2학년·3학년의 선택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예산배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의 교원부족 상황을 위해 우리가 교사양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대학에 학사편입을 해서 학사 2년간 70학점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획과 함께 특별히 초등학교 교사가 아주 부족한 지역들,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는 교대를 졸업한 200명 가운데 호남지역의 취업을 희망한 학생이 불과 20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근본적으로 그 지역 교대 출신의 교사들이 그 지역에 봉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富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 委員 趙富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아마 경상수지를 8%

로, 실제 경제성장률을 5%로 보고 이렇게 내년도 세입추계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초반 대로 추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입 면에서 결함이 생길 것이다, 1996년부터 IMF 이후 98년까지 대개 2조 5000억 정도 세계결함이 생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한 5조 정도 생겨서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예산도 대폭 늘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96년에서 98년까지 되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텐데 아마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내에서 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중에서 특히 민간경제 부문의 규모가 대폭 커지는데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이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취지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5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의 수월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감으로써 그것이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확대실시해서 오히려 교육의 평준화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방안의 일환도 되겠습니다만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도 일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열 몇 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산편성에 어떤 감안을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잘못 얘기가 되어서 시끄러워졌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경제가 커진 상황에서 재정기여를 포함해서 기여입학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해 가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내년도에 특별히 세수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론 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개진 한 바 있

습니다만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특히 전문대학 육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업교육이 황폐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업교육을 보다 현실화하고 베이스 업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3년도 예산에 보면 농특세 예산으로 5개 전문대학, 공립대학을 신설하는데 매년 30억씩 지원해서 4년 동안 하면 120억이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5억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30억 그래서 1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것이 내년으로 끝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아주 엉망입니다.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재정도 그런데 그 운영비의 지원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를 전체 다 못봤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살펴 보니까 세항 3214 전문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대학의 시설비로 90억 9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대학은 시설비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대학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겠지만 지금 전문대학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면 요청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학교수를 보다 늘려서 전문대학 적어도 지방대학 육성하는데 획기적인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曹正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正茂 委員 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요 현안인 수능시험과 중·초교사 임용,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수능시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지난해보다 까다롭게 출제하겠다”고 예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난이도 조정 실패로 가채점 결과 상위권이 30점, 중위권이 40~50점, 하위권이 50~60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주요 원인으로서는 출제위원들의 난이도 조정 실패와

海瓚 1세대라고 불리는 현 고3 수험생들의 학력저하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출제위원장은 “매학년 수험생들의 능력수준에 맞춰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변별력 확보차원에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며 일부 고3 담임교사는 “수능 문제의 질적 수준은 양호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총리, 수능의 난이도 조정 실패는 그 자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잦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극과 극을 타는 롤러 코스트식 출제방식과 교육파로 시험파로식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올해 수능의 경우 선발고사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변별력에 치중한 시험이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향후 수능에서도 올해와 같이 변별력 위주의 어려운 수능을 출제할 계획입니까? 예비수험생을 생각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어려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접나서 채점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고3 교실은 심리적 공황상태이고 학부모들은 “해마다 난이도가 바뀌니 학생들이 무슨 교육정책 실험대상이나”고 교육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수능시험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시험이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일선 전문가들은 올 수능의 여파로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수장이 사과 몇 마디 했다고 그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능제도의 안정을 위해선 평가기관의 상시가동, 문체은행식 출제방법, 표준점수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능시험을 자격기준으로 삼겠다는 9등급제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98년 현 정부가 공언한 국민적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부총리, 예측가능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중·초교사 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보수교육사태 때에도 교대협은 동맹 수업거부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10월14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정년 단축 및 명예퇴직 교원증가로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보수교육 대상자 추가선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고 99년10월 25일에는 교대협이 더 이상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보수교육 대상자 추가선발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내용을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와 전국교육대학 총장회의에서 명문화하여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일에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은 특별편입제도라 하여 형식적으로는 이름을 달리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선발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의 추가 선발과 일치합니다.

이는 99년도 보수교육사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더 이상 없다는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닌지 차관이 답변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11월2일 2002학년도,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교대협에선 첫째, 증원된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의 숫자가 교대 수용능력에 비해 매우 과다해 교대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초등교원 전문성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2002학년도, 2003학년도의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과 나머지 부족한 교원은 교과 전담강사로 임용하는 방안은 이미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이 다수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강사에 의한 초등교육의 확대가 불을 보듯 환하므로 이는 초등교육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

셋째, 실제로 2002년도 경북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사 지원자의 절반이 50대로 나타나 초등교사의 고령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해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초등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등교원 수급대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는 초등교육 개혁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교대협도 이를 위해 이번에 문제된 중초교사 사안이 일단락 된 후에도 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초등교원 수급대책의 중·장기적 공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초등교원의 시·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시설사업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방송대의 설립목적은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측면에서 경제적, 지리적, 연령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격교육방식에 의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교양교육과 더불어 각종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국민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발전과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을 꾀하는 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인의 평생학습 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등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 재교육 실적 면에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방송대의 활성화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사업 중 대규모의 예산이 들고 그 편익이 미래세대에도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국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예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들 수 있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국립학교의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지원하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담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만약 중요시설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방송대의 경우에는 학습관이 중요시설이므로 전액 국고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에서 국고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립대학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아 방송대의 경우 3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대는 60%, 충남대는 55%, 전북대는 57%, 서울산업대는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방송대의 경우에는 다른 국립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등록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는 등록률은 방송통신대의 경우 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학기 등록생보다 2학기 등록생이 크게 감소하는 사실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의 2002년 시설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울산시학습관 신축으로 20억을 배정하고 있으나 당초 공사완료기간인 2002년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32억 8000만 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003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학교운영 계획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산학습관의 경우에도 처음 약속한 국고지원액을 배정하지 않아 올해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약속했던 국고지원액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다른 국립학교와는 달리 중요시설에도 기성회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대 시설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에 대한 질의와 교원충원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花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委員 새천년민주당의 金花中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韓完相 부총리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전담 의원일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병원은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좀 그만 예산 지원하고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서울대분당병원 지원사업이 2002년 예산에는 2001년보다 82.4%가 증가하여 658억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은 2002년에 소요되는 분당병원 건립예산 818억 8000만 원을 당초 서울대병원이 자체조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누적적자를 이유로 소요예산 중 658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60억 8000만 원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분당병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고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도 해 왔습니다.

이번 2002년 예산안 요구도 서울대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요구 그대로 예산을 올려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일부 사립대학병원의 2000년도 경영운영실적을 보면 평균 78억 58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입원대기일이 무려 25.6일로 한 달 정도 대기해야 입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이 환자가 밀려 있는 실정에 입원환자의 진료일수를 하루만 줄여도 10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입원대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적자라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짓는데 국고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적자라는 이유로 다른 국립대학병원들이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각 대학병원들을 보면 그 지역의 사립대학병원보다 진료일수가 짧고 건당 진료비가 가장 낮으며 병상회전율도 가장 높고 가동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타 국립대학병원들은 적자를 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60억 원의 작년도 예산지원도 삭감하여 30억 원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신설되는 국립대학병원들의 치과 또 의과 양 실험실습비 요청을 약 60억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원했던 예산 중에서도 32억 6700만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타 국립대학병원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한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운영하고 적자만 내면 국고가 지원되는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당병원의 준공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개설해야 되며 금년도에는 꼭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입원대기를 줄이고 건당 진료일수, 진료비 부담을 줄이며 병상회전율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퇴원입니다.

조기퇴원환자의 지속적인 병원진료 유지 방안으로 환자가 가정에서 서울대학병원의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타 국립대학병원들이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대학병원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굳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장님께서서는 여기에 대해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기퇴원을 위해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할 의지가 있으신지만 밝혀 주시고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學校病院長 박용현 가정간호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했었습니다. 그러나 金花中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花中 委員 검토만 하시지 말고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실시했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大學校病院長 박용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花中 委員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는 다 계정해 주시고, 나머지 국립대학병원들도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병원장님들께서 박리다매를 할 정도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정된 예산도 삭감하고 또 달라고 하는 것도 전액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또 새롭게 요청되는 실험실습기자재 예산 요구를 전액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의 다양화·특성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대학의 다양화·특성화사업은 전문대학 지원사업 예산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16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특성화 지원사업에 1370억 원, 주문식교육사업에 160억 원, 향토산업거점대학 육성사업에 60억 원,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56억 원, 신직업 교육문화육성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전문대학의 특성화사업 1370억 원은 그동안 특성화 지원사업 400억 원, 구조조정 지원사업 30억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700억 원으로 나누어 추진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면서 24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0억 원의 증액편성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통합됨으로 해서 총액예산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은 유사점이 많고 통합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은 79년부터 중견직업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기 시작하여 국가산업인력 충원에 중추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동안 4년제 대학 부문에 비해 관심 부족과 예산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예산 지원방식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방식은 전문대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매년 단위로 특정분야 사업을 선정하고 제출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대 관계자들은 연차적 계획에 근거하여 국고지원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국고지원분만을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해 전시성 평가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별도 팀을 구성해서 예산지원만을 위한 예산지원만을 구성하여 서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지원방식은 교육예산 로비스트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의 특성화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제에 현재의 단년도 위주 및 각 전문대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위주의 지원방식을 중·장기적 사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조성사업입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에 포함되는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신진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 연구소 기자재 지원 등 타 사업 이관분을 포함하여 2001년도 예산이 1512억 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23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예산의 기초학문육성사업 중 인문·사회과학 지원 예산이 2001년도에 40억 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940억 원으로 편성되어 9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낮았던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신장된 것으로 전체 학문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분에 의해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편성 단계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나 명확한 세부집행이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예산의 용도와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술연구지원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국정 감사시에도 지적했지만 중복지원, 이중참여, 부실한 연구결과 점검 등이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분야는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문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연구교수나 Post-Doc 인건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될 경우가 많은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입니다.

1953년 양호교사가 범제화되면서 50년이 지나는데 동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전문가인 동시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였으나 타 과목의 교사들은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양호교사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교총, 한교조, 전교조, 대한간호협회 등의 요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활동 예산 22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호교사의 보건활동을 장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번 2002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정부 예산으로 계정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질 의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관한 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관한 건, 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질의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덟 분 남으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委員長 李揆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오전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인사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선 보임되신 위원님은 李仁基 위원님, 朴相熙

위원님, 李美卿 위원님이 계시는데 먼저 李仁基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李仁基 委員 고3 학부형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수능시험 그리고 교육 전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 위원회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李仁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基 委員 교육부총리께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7일 치루어진 대입수능시험에서 성적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보다 60점 안팎, 중위권은 80점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들은 중도에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으며 쉬는 시간에 울음을 터뜨리는 수험생이 많았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수능의 테러다, 냉탕 온탕식 수능이다 이렇게 비난이 많이 일고 있다는 것은 듣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仁基 委員 부총리께서 3일 전인 11월9일 국회 예결위에서 “지난해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는 여론이 많아서 올해 다소 어렵게 하되 재작년보다 쉽게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와서 나 자신도 실망하고 크게 충격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난이도 조절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교생들의 학력저하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 안팎에서 학력저하현상에 대한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했지만 한번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와 불만은 현 정부가 선진국 교육제도의 걸모습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실시한 교육개혁이 실패한 결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98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98년10월 당시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3학년,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적용될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사실은 취임하시고 나서 알고 계시지요? 그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仁基 委員 저도 그 때의 기억이 납니다.

점수위주의 획일적인 대입전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이제 수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등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해 특기와 적성이 중시되도록 한 다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것을 받아서 발표하기를 무시험 특별전형 확대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안 보고도 대학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간다, 과학만 잘하면 대학간다, 수학을 못 해도 어느 한 과목 잘하면 간다 이런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도외시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그 뒤에 각 대학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특별전형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신설했지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미스코리아 미인대회 입상자를 뽑는 그런 특별전형도 있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李仁基 委員 그런 데가 있습니다.

고교생들이 학교공부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 오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통해서도 듣고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입시학원의 관계자들도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해가 갈수록 1, 2점이 아니고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기에 쳐봐도 이삼십 점씩 뚝뚝 떨어진다는 이런 우려를 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금년 수능하기 전에 들으신 적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비슷한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李仁基 委員 뒤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최근에 고3 학력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치면 혹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성적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정식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仁基 委員 그러면 부총리께서만 그 내용을 모르시고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현상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바람에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 학부모들도 반대를 하고 교사들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창의력과 욕망에 불타는 학생들마저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절대적인 학습량이 줄어서 실력이 전부 다 내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3반에서 치른 월말고사 시험도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시험에 있어서 분명히 98년도에 지금 중3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입시를 치러서 선택한다라고 발표했고 그동안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능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저희들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주말에 지역구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경북 칠곡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들이 표현하는 용어는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의 50%나 표현했겠습니까?

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니까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너무 슬픈 상처를 주고, 시험이 어려워 시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속된 학교, 정부 더 나아가서는 그 학생들이 태어나서 6년, 6년 12년을 교육받고 살아온 국가에 대한 원망을 할까 두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난이도를 어떻게 50점, 70점이 차이 나게 출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내일 2시에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난이도 조정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난이도가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도 벼락맞은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는데 국민들이야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학생들은 얼마나 혼란을 느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아픔을 공감합니다.

특히 금년 들어와서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작년 보다는 약간 어렵게 하되 재작년보다는 쉽게 하라는 지침을……

○李仁基 委員 저도 그 수준이 딱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출제위원이 그렇게 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충 몇 가지 이유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상당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李仁基 委員 부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설사 그러한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부총리께서 제시하는 그 난이도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대학에도 계셨었는데 무슨 출제위원을 해서 폐쇄된 장소에 있어 분석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있습니다.

○李仁基 委員 이유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28일간 거기 계시도록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은 4, 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출제위원으로 15일 내지 20일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작년에 나온 문제 검토하고 최근에 나온 문제를 배제하고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배제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14일을 들어가도 12일이 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 내는 시간은 2일밖에 안 주어지거든요. 우리 이 상황도 아마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문제 낼 수 있는 기간은 한 4일밖에 안 되니까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일 어떤 좋은 질의와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仁基 委員 그리고 저는 항상 시골에 가면 학교를 가 봅니다. 어제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 일요일인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인데 왜 안 쉬고 공사를 하냐고 했더니……

교실 증축문제,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은 다 놔두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놔두고 겨울에 영하 1도, 5도 이렇게 내려가면 콘크리트 같은 것 양생을 하면 견고하게 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이렇게 교실을 증축해서 35명이라는 숫자로 내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는 다른 훌륭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선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학부형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부분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委員 설명은 제하고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의 의견도 가미해서 대 여섯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달에 있었던 金大中 대통령과 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정을 위해 공동연구와 공동노력을 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2년 예산안에 20억을 산정해 두었는데 그 20억 중에 10억이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10억이 교육개발원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억 전체의 내역이 대개 한 15억 정도는 심포지엄, 자료수집 또 도서관 운영, 인터넷 구축,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이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본에서 검·인정을 할 때 또 터져 나올 문제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 될텐데 도대체 이 사업의 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구용역을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책임 관리의 주무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대책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그 주무기관으로서 정신문화원이 좋겠다 하는 제의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 매우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한 그 결과를 누가 집약하고 취합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관리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실업계 고교의 육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에 실업교육육성방안이라 해

가지고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까? 혹시 이것 가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실업교육육성방안의 예산소요확보계획이라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097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면 작년에 506억 원이었는데 불과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07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29억 원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507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1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 가운데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기자재 대체나 확충을 위해 육성방안에 의하면 662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에는 실제로 228억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같은 육성방안을 발표해 놓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 전문대학을 보면 금년에 예산을 아주 과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800억이었던 예산을 금년에 1650억으로 2배 이상 증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능인력을 키우는 중추적 교육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실업계 고교 전반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를 통해 기능전문인력을 만들겠다고 하여 육성방안을 내놓고 전문대학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인력정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백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대학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라면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의 역할이 어디서 분담되는 것인가, 이것이 막연히 세월이나 돈만 드는 교육인플레이션상으로서 2년간 투자를 더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문제는 교육인플레가 너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12년만 받아도 될 교육을 14년으로 늘리고 16년만 받아도 될 교육을 20년, 25년으로 늘림으로써 우리가 지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교육과 관련하여 전문대와 실업계 고교의 역할 문제, 실업계고교의 육성방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며칠만에 실종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국립대학병원 지원금으로 서울대학에 763억 원이 가고 지방국립대학은 예산이 도로 깎였습니다. 전남대학만 4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평균해서 보면 전부 다 도로 깎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중환자가 생겼을 때 전부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라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병원환자들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방대학병원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국립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시설도 모자라고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지방대학 육성비로 500억을 책정해 놔는데 25개교의 국·공·사립에 구분 없이 갈라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 20억씩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 가지고 푼돈 쥐서 지방대학이 육성되겠습니까? 한 학교에 20억씩 주어 가지고 지방대학을 과연 육성할 수 있겠느냐, 예산의 탄력성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방대학의 문제는 정부지원의 부재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대학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994년 설립증축비가 나온 이래로 지방에 우후죽순처럼 대학들이 생겨 가지고, 특히 사립대학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방대학의 큰 문제입니다. 정원미달률이 2000년에 5.7%이고 2003년이 되면 이것이 훨씬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문제는 정부가 그냥 10억씩, 20억씩 갈라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중심정책을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한 지방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방대학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이웃대학과 쉽게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원이 없고 교수가 다 떠나간 대학들은 대학시설을 다른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등 여러 가지 사회 후생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것을 콕 틀어쥐고 규제일변도로 해서 사실상 통·폐합도 불가능하게 하고 학과의 증·폐설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잔뜩 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접수하겠다는, 빼앗아 가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끌어간다면 지방대학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설립한 출연자들이 이것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적인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보면 해외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것이 흩어져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제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교육진흥원은 작년보다도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든 155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수익이 있어야 무슨 책임을 지든지 경영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국제교육진흥원이 무슨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수익기관도 아닌데 왜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부실한 이중적인 경영을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 관계를 전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이 기능을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숫제 국제교육진흥원을 없애든지 혹은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총리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국립대학교에 한의대를 하겠다, 신청을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991년에 동결조치를 했고 지난 3월에도 의료기관의 정원동결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통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복지부가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를 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거기에 덩달아서 국립대학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의 모든 인력자원을 관할하는 부총리 기관으로 격상되었는데 복지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하위의 기관인지? 또 지난 3월까지 의료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필요있는 것으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사전에 K대학, S대학을 찍어놓고서 하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풍문마저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하라고 하니깐 각 도마다 야단이 났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대학에서 하겠다, 충청도에서 충주대학이 하겠다, 우리 뒷산에는 약초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의학과 학생들이 약초 캐러 다니는 무슨 나무꾼들입니까? 약초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뒷산에서, 필요하면 외국에서도 가져오는 것인데…… 이런 대 혼란을 국립대학에 야기시키고 지금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대는 사립대학에서, 왜냐하면 돈이 덜 드는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서 해 왔고 경비가 많이 드는 양의학은 국립대학에서 지금까지 역할분담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뒤집느냐는 것입니다. 왜 1, 2개 대학을 위해서 원칙을 뒤집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서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27일에 교사들 7072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수업을 팽개치고 나섰고 그 중 4900여 명은 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교육단체가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사회혼란에 크게 한 몫을 하고 또 학생들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여러 번 자체를 당부하고 경고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치 옛날에 교원단체가 불법적인 낙선운동까지 하는 것을 대통령이 부추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원단체가 자신들을 초법적인 단체로 오인하고 무소불위의, 안하무인의 행동을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계의 기강과 질서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부총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熙 위원님 차례이신데 아까 사·보임 보고할 때 인사를 드리지 않으셨으니까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熙 委員 제가 오늘 하루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었습니다.

온 김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朴相熙 위원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총리 및 교육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요즘 조기교육, 천재교육, 영재교육 등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데 창의성과 사회·도덕적 성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3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즉,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복지가 필요할 실정입니다.

현재 유아교육 대상인 3살에서 5살까지의 아이는 200만 명으로 이 중 54만 명 정도가 유치원생이고 55만 명 정도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절반이상이 민간운영이고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치원의 비중보다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유아교육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국가인재 개발의 논리보다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서 공교육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런 유아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공교육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첨예한 이해다툼 그리고 이들을 관장하는 소관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원화 체제 등의 문제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83억 배정된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취원을 제고를 통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오던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소관부처 간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서로 달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따라 수혜대상이 다르게 결정되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기준을 내년 2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준이 내년 2월에 발표되면 그때는 이미 유치원의 원생모집이 끝나 지원대상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어디에 맞출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내년 2월 그 대상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나 이렇게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연내에 이것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 이 사업은 의무교육과는 달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들어가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과외 비용이 없어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져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조차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둔 부모가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에 원하는 시간까지 제공해 주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

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지난 82년 이후 20여 년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각국의 일본관련 서술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일본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를 통해 인접국가 간에 얽혀진 역사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과 독일 등 전범국가에서는 각국의 교과서 서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국의 이미지 관리와 역사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쟁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매번 당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 내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부문에 계상한 예산은 20억 원으로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외국의 역사교과서 수집·분석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고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교육의 위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예산은 22조 3250억 원으로 2001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11.5%, 추경을 포함할 경우에는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예산을 공교육을 살리는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교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선택권과 질을 높이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교육예산의 절감 등을 이유로 자립형 사립고교를 내년에 세 군데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립형 사립고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979년 영국 총리로 집권한 보수당의 마거리트 대처는 '능력있는 20%를 배출하여 나머지 80%의 뒤쳐진 이들을 이끄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의 인재가 소위 귀족학교인 사립학교 출신이며 나머지 80%가 공교육 대상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경영도 시장 자유경제 원리에 따르도록 만들었습

니다. 무한권한을 얻은 각 교장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사계약제, 파트타임, 능률급, 성과급 등이라는 무한 자율경쟁 방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에 대하여 저예산정책으로 일관한 제도로 소신있는 영국 교사들은 의욕을 상실하였고 정체성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영국의 주간교육신문에는 ‘우리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구합니다’라는 구인광고가 실렸고 가을학기인 지금 당장에도 교사가 부족하여 주4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도 영국의 교육당국은 유럽국가 아닌 카자흐스탄, 페루, 몽골 등 55개국에서 2000명의 교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교육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혁적으로 시행하는 교사등급제 등 일련의 정책들이 교수제임용제처럼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처럼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교사들을 도태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특수목적고가 대학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예를 이미 보았듯이 자립형 사립고교라는 제도도 머지않아 신귀족학교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육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라 볼 때 자립형 사립고교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먼저 기초학력책임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제에서 져야 되느냐? 물론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장 주된,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국감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또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평가해야만 요사이 논란이 되는 수능문제와 같이 매년 널뛰기식의,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2001년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으로 지방비 159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런데 2002년도의 예산을 보면 기초학력부진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28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학력책임제도는 지방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에 대한 것은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 예산요구액 149억 원 중 예산이 지금 3억 9000만 원으로 반영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는데 최근에 학력저하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고 도하 언론에서 현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것 중 하나가 이상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0점 정도가 하락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깊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험문제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아무리 시험문제가 어려워도 이렇게 점수가 하락하겠느냐? 거기에는 우리의 학력 저하가 따르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학력이 저하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험문제를 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 체제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만5세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우선 첫째로 대상인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비율을 33.5% 대 66.5%로 적용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추계일 뿐만 아니라 2000년도 만5세아의 취원비율은 오히려 유치원이 59.8%에 보육시설이 40.2%로 나오고 있는데 이 취원비율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취원비율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교육인적자원부예산과 보건복지부예산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왜곡시키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2월에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2월이면 이미 원아모집이 다 끝난 상태로서 예산이 맞지 않을 때는 부처 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만5세 이상의 유아들이 교육을 상당히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이나 그 밖에 각종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종교기관 또는 가정에서 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26조에 보면 교육권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기 아동, 자기 자녀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선택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중에 특수한 일부 기관에만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할 때는 나머지 기관들의 교육을 아주 쇠락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한 여러 가지 교육재원, 교육투자에 대한 낭비 또 심지어 부모의 다양한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의 왜곡현상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아교육을 부모가 어떻게 시킬지, 다양한 교육기관 중에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바우처방식이라고 할까 부모의 선택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육수단이 사회에서 발전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로서는 국가의 지원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기관에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시스템으로 학부모를 지원하는 체제는 이미 영국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이 방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만일 이번에 이렇게 유치원과 보육기관에만 특별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미술학원이나 속셈학원, 기타 학원들도 사실상은 전인교육에 준해서 시켜 왔는데 그런 데 따르는 혼란은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간단

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11월2일 발표된 교육감 추천 교대편입학제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서 추천받는 도의 임용시험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500명을 지금 6개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고 교육대 측은 15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렇다 하더라도 2003년까지 1만 1360명이 추가로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예컨대 1년에 두 명씩이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서 교원도 정상적으로 확보하시고 또 학교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을 가는 것인데 과대학교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수가 수십 학급씩 되는 학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신다면 예전의 200만 호 건설처럼 어느 때 가서는 큰 후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꺼번에 많은 교사들을 일거에 발령을 내서 임용을 하신 다음에 이런 수요가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교원들의 연령층이 피라미드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고 특정연령층만 과다하게 형성되는 교원의 연령층 형태도 교육계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보다 신중하게 재고를 하셔서 아까운 혈세와 재원을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교육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재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예산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감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중·고교 조도미달예산도 이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수학교 관련 예산도 이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특히 대학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예산을 75억 원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등교육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부분도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것은 48.4%나 증액이 되었

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그리고 집단따돌림과 비행학생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말썬이 되어 왔던 교육청의 일반업무비 편법사용을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시려는지, 이 점에 대한 예산지침이나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교육환경개선 또 학급 신·증설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田溶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委員 田溶鶴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이 선보였고 우리 교육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시다라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큰 방향은 옳았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부분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개혁 정책이 정략적으로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정책 자체를 호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치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교육이 개혁의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파탄이 난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교육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직접홍보나 대언론관계에서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관련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선배·동료위원들께서 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몇 가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자 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취업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최신자료를 제공할 목적과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취업통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DB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비 5000만원, 시스템구축비 4억 19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졸업자수가 대학의 경우 45만 6000명,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미진학자 24만 4000명 등 70만 명을 DB로 구축해서 국가차원의 인력수급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여러 부처가 연계된 사업인데 부처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 및 취업자수 현황을 작성하는 노동부의 자료가 더욱 정확할 수가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도의 취업자 DB를 구축하는 것은 노동부와 업무의 중복으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졸업자의 취업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노동부, 상급학교, 보건복지부, 학교 등 정부기관의 전산망 DB를 통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취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상을 전 부처에 걸쳐서 확인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의문시되는 측면이 크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해킹이나 관련자의 관리 소홀로 정보가 누출될 경우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DB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교졸업생의 대부분이 군입대 전까지 단기로 취업을 하다가 군 제대 후에 대부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실업고 졸업생 1년 내 직장 이직률을 보면 약 40%에 달해 최소한 군 제대 때까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만 자료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자료보완을 위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은 불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택장애학생 및 대학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1항과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순회교육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의 정도·중복화로 가정이나 병원, 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택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체제,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나 학습자료 개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重度·중복장애로 가정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교육기회 및 적절한 교육의 보장을 위한 기초연구와 운영에 대한 현장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과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재·교구의 부족, 원거리 재택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부족 및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택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택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 전문성을 구비한 교사배치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립특수교육원의 예산에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 말에는 장애학생 출현율 조사가 완료됩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산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출현율 조사가 완료되고 2002년도 예산에 재택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비가 확보되어야 재택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도 예산에 재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14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반드시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

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식지원비 지원체제 개편과 예산 증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와 경제 여건의 악화로 해체가정이나 실직가정이 증가해서 중식지원 대상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현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 수요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중식지원 문제는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행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식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입니다. 그런데 2000년 및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부산·대구·대전·충남 교육청으로 4개나 되며 2001년도 중식지원비 중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전국 평균 70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이 9개나 됩니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 간의 지원액 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전무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 전무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타 예산을 축소시킴은 물론 중식지원 예산을 축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중식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원대상 선정방법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대상자 선정을 학년초인 3월에 하기 때문에 3월 이후 발생한 결손가정 및 실직자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중식지원의 대상은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빈곤가정의 학생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극빈 결식아동 석식지원 사업의 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은 각급 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급식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2002년도 예산안에서 방학 중 중식지원 대상학생을 학기 중 대상학생 19만 7703명의 55% 정도인 10만 8648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2001년5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학생 중식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방학 중에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의 비율이 응답자의 72%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현재의 예산보다 3만 4000여 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은 77억 9000여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중식지원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과 함께 예산의 추가적 증액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지원비용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업교육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인력 양성의 증추기능을 담당해 오던 고등학교 실업교육이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로 인해 종국적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전문대학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해까지 지급하지 않던 국립전문대 실험실습비의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전문대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에서 국립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약 1만 4500원으로 책정되어 4개 국립전문대학의 총 실험실습비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국립전문대학이 4개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실험실습 위주로 한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천안공업전문대의 부족교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안공업전문대는 2000년부터 환경공업과, 시각정보디자인과가 신설되었고 내년도에 공업경영과, 2005년도에는 식품공업과를 증설할 예정에 있으나 캠퍼스 부지가 협소하여 교사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천안공업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면적이 4개 국립전문대학 중 최하위이며 청주과학대와 비교하면 4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히 불평등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시설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 7억 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조치를 바랍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지원 예산의 문제점,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관련한 내용, 과학교육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의식확대를 위한 방안, 그리고 올해 수능의 난이도 조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밝히는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李在五 위원님, 薛勳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 **李在五 委員** 알겠습니다.

○ **薛勳 委員** 李在五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질의할 것도 있고 해서 李在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 등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4월 과외금지 조항 위헌결정이 난 뒤 과외과외를 예방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대안의 하나로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을 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있어 다른 방송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육방송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 국민 홍보에 교육방송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제작 협의 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방송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접하게 정책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있다가 공사로 되면서 문화관광부 쪽으로 이전되는 관계로 해서 협조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방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위성방송 1·2 TV는 학교교육 프로그램 전용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고보조금형태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되었다고 해서 지원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처음에 사교육비를 경감하자고 했던 취지자체가 무색해 질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데도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방송에 지원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방송이 다 좋습니다마는 교육방송은 특히 내용이 충실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봐야 할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게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방송이 살아나고 교육방송의 시청률이 높아지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넓어질 것입니다. 교육방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정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립유치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치원수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마는 예산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와 70년대에 범죄율이 높고 문제가 많았는데 2000년대에 오니까 범죄율도 떨어지고 미국 사회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60년대에 미국정부가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입안해서 저소득층가정을 위해 대규모로 유치원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 유아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자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안정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교육에 지원을 하는 것이 결코 막말로 해서 남는 장시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1달러 투자했을 때 7달러의 효율성

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에 인색하게 하면 결국 우리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방비 포함해서 8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아용 교재·교구의 구입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교구 구입이 가능하도록 1개 유치원당 지원 액수를 증액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교과목 교사가 직업교육 교과목을 담당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여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자 그러려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2004년까지 특수학교 중등교사 2400명을 연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이 사업의 예산이 2002년 예산에서는 2억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지방비에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물론 지방비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에 넘겨놓았다면 실제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예산규모가 너무 낮습니다. 지방비를 포함해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됩니다. 미국이 15%이고 일본은 5.6%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더구나 특수교육 직업담당교사 연수사업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한시적인 사업대상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직업도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직업담당 교사의 연수는 계속해서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

므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사가 계속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이 해마다 용두사미격으로 줄어들어서 2000년에는 24억이던 것이 2001년에는 16억 원, 2002년에는 2억 3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을 그만 둘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이 사업을 이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양을 하려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맡 것인지는 아니면 조금 더 내실화 시켜서 제대로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능관계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李在五 委員 그것이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렇다면 업무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잘못되면 책임은 총리가 져야 되는 것인데 소속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在五 委員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능이 잘못되었다고 총리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에 평가원이 있어야지 육은 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먹고 소속은 총리실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영세민들하고 저소득층자녀들 취학전 5세아 무상교육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것 말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자녀들 중에 유치

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가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있는 동네 유아미술학원 같은 곳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미술학원에서 미술만 가르쳐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아미술학원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데려다 놓았다가 저녁에 찾아서 데려가고, 유치원 없으면 멀리 있는 유치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 맡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저소득층 자녀라도 어떤 애는 거리라든지 부모 형편상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떤 애는 유아미술학원에 맡기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맡긴 애는 혜택을 보고 유아미술학원에 맡긴 애는 혜택을 못 보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미술학원은 학원이라는 범주에 들기 때문에 사설학원을 지원하는 문제와 겹치고 좀 원칙에 걸려서……

○李在五 委員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설학원이라는 데는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데인데 다니기 싫으면 안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부총리께서 직접 해당 자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해직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같은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도 전남대, 전북대의 교수들은 지난번 12명에게 1, 2차에 걸쳐서 12억 원 정도 보상이 되었는데 같은 전남, 전북의 사립대, 조선대 교수들은 이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전남지역에 있는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렵에 공·사립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해직되었지 않습니까? 한 76명쯤 되는데 명예회복이든 보상이든 하려면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그래야 법정신에도 맞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시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李在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李在五 委員 자료를 읽어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5·18 당시에 광주에서 해직된 대학교수는 보상을 받고 서울에서 해직된 교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朴昌達 위원, 金貞淑 위원, 曹正茂 위원, 金花中 위원, 田溶鶴 위원, 李在五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질의가 없었던 직속 기관장 및 단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揆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韓完相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아마 중복된 질의가 조금 있을 것인데 일괄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능 관계는 어차피 내일 또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오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존경하는 朴昌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셨고 국가재정 여건상 조기확대 실시의 불가함을 대통령께 직언드린 적이 있는지 물으셨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부분적으로 도입된 이래 전면확대 실시는 우리 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가재정상 2004년에 실시하기로 계획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복지시설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부처의 지원합의에 따라서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 개정과 국회의 예산심의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부족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보를 전제로 한 교육복지 실현과 우리 부의 숙원사업 해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통치권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합의에 의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昌達 위원님께서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의 왜곡된 사실을 규명하고 친일역사의 청산을 위한 사업에 우리 부가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진실규명과 친일역사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사용될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 시에 친일행위를 포함한 한국 근·현대사 부분의 기술방안과 관련해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전문가로 구성된 1종도서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사교과서심의위원회 등에서 검토와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역사 청산문제는 학자들 간에 자기 사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朴昌達 위원님께서 현재 친일과 인명사전 편찬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액을 신규계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일행위를 포함해서 과거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일과 인명사전 편찬은 그 후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정리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것이 해결되었을 텐데 여기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을 우리 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부는 친일문제 처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자체가 동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요구한다고 보고 이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욱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朴昌達·金德圭·金花中 위원님께서는 기초학문연구비 지원예산의 책정근거와 지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이공계 위주의 과학기술개발분야 등 실용학문 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비판은 기초학문의 위기감을 느끼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문학 등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3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문 분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문학에서 사회학, 수학, 한국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인문학·사회과학·기초과학 분야의 순수기초이론 연구에 12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공동연구, 협동연구 학제 간 연구과제 발굴지원 등 기초학문의 연구와 저작을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는 소형과제에 360억 원, 중형과제에 300억 원, 대형과제에 1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영역은 과학기술부의 목적기초과학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순수기초 연구에 약 2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朴昌達 委員** 답변 끝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통치권자의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韓完相 부총리께서는 소신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부, 金大中 대통령께서 통치할 기간이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대통령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와 같은 어떤 관행을 무시한 결단이 나왔을 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합한지 여론의 수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昌達 委員** 왜 그러냐 하면 10월19일에 이것

에 반대를 했고 12월6일에도 반대했다가 바로 1월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총리께서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였던 GDP 대비 6%의 교육예산 확보를 대통령께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GDP 교육재정 6%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GDP 대비 교육재정이 98년에는 4.36%였고 99년에는 4.21%로 조금 떨어졌다가 2000년도 되면서 4.39%, 2001년에는 4.65%, 그리고 2002년에는 4.73%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너무 미미합니다. 이것이 6%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학사편입의 증원에 따른 교육계 시설, 교수 등의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현 교원수급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교원수급정책의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추천 편입생 증원으로 교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증원인원이 2003년도의 2500명은 전국 교대 수용능력 2만여 명의 8분의 1 규모지만 학생들은 그 한 해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편입생 규모가 정원의 50%라는 주장은 3학년만의 입학정원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전국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교육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안 가는 산간벽지를 포함한 6개 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주·야간제, 계절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하면 현재의 교육대학 인력·시설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혹시 모자라면 교원대학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교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수정원 증원, 환경개선투자 확대 등 행·재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가칭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초등교원 수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

확입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지금 2500명 발표하셨잖아요? 제가 교대생들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안 오셨지만 대화를 했을 때 타결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교대생들은 1500명을 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2500명으로 계속 밀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2500명 하기로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대학생들은 이틀테면 강원도의 춘천교대를 나와서 강원도 산간벽지에 필요한 교사들이 많은데 그 쪽으로 안 가고 자기들은 중앙에 오면서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그것도 70학점 2년을 학사편입 정식으로 시켜서, 원래 우리는 특별편입제라고 했는데 ‘특별’도 떼어라 해서 ‘특별’도 떼어주어서 정식 학사제로 하는데 다만 2003년 한 해만은 이것을 2500명으로 한다 그 후에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 2003년 2학기부터 하려던 것을 2004년도로 시간도 연기해 주고 숫자도 원래는 우리가 400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3000명으로 줄였다가 2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대학총장 11명의 이야기 다 듣고 시·도교육감 이야기도 다 듣고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한 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런데 한 해에 한해서라지만 그 한 해에 3440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학사편입을 20% 받으니까 940명에서 3440명이 한 해에 늘어나는 것인데, 물론 학사편입 20%는 아니지만 2500명에 대해서는 계절제 또는 야간제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러면 계절제나 야간제 수업을 해서 4년 동안의 교대 정규과정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과연 교육의 질이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계절제 대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대학총장님 11명과 교육대학 교수협의회의 의견도 물어보았는데 자기들은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金貞淑 委員** 저는 계절제나 야간제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받는 교육의 질은 정규과정의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질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2500명을 다 고집하실 일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선인 한 1500명 정도로 하고 아니면 2000명 정도로 한다든가 해서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정년연장안을 내놓은 것과 자민련에서 내놓은 것을 교육위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800명 정도를 택하고, 1년 연장하면 적어도 한 800명은 못 나가겠지요. 또 이 분위기로 하면 명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신바람이 나서 조금 덜 나갈 것이고 그러면 대충 그래도 급한 불은 어느 정도……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를 1년에 잘 교육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라도 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500명을 계속 고집 부리신다면 교육대생들과 마찰이 더 생길지 의심스럽고 또 안 생긴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이 염려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기간제 교사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도 연령을 다 터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연령의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조건이라도 만들어서 기간제라고 해서 다 배제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탁월한 분들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2500명은 조금 줄이셔서 교육대생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2500명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조금 조정하시고, 이렇게 몇 가지를 동시에 쓰시라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질 좋은 기간제 교사를 뽑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지금 학사편입한다고 그랬는데 언론에는 57세, 55세 짜리도 초임으로 임용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교단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교대 나온 정규교사들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들어온 교사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바로 그만두겠습니까? 계속 정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500명을 요구하는 선까지인 1500명으로 줄여보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제안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500명은 4000명에서 3000명으로 또 2500명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대 학장들이……

○**金貞淑 委員** 부총리님! 만약에 정년이 1년 늘어나면 가능하지요? 1년 늘어나면 가능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국민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생과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충격이었고 아까 李仁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솔직히 벼락맞은 기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난이도 조정 실패는 우리가 수능시험 채점결과가 다 나오는 12월 초에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도 가채점해 본 결과 거의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제위원들이 이번에는 사고력을 테스트 하기 위해서 문제를 참신한 것을 내자는 의욕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그 분들이 작년 수능시험이 너무 변별력이 없었다, 너무 쉬웠다는 여론의 질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원칙상 수능시험은 기초학력에 대한 실력과 상상력, 사고력 테스트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7만 명의 재수생이 이번에 시험을 보지 않았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도 빠져서 그것이 이번의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다고만 보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더……

○**金貞淑 委員** 내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각이 너무 무사안일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너무나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교육정책의 실패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시험 봤던 재수생 아이들하고 금년에 시험 본 아이들하고 기본학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금년 아이들이 좀 열등하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아이들한테 시험문제를 작년에 비해서 수준을 더 악화시켜 놓으니까 작년에 만점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 최악의 경우 한 20점 정도 떨어진다면 금년 아이들은 육칠십 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렵게 나오면 더 잘해요. 그리고 공부 안 한 아이들은 더 떨어져 버리고. 순서대로 커트가 되어서 합격이 결정되니까 상대적으로 금년 아이들이 모조리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두 번째로 방금 부총리께서 창의력 교육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고등

교육에서 창의력 교육을 시켰어야지요. 제가 학부모라서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데 안 시키고 2시, 1시에 집에 보내요.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 못 하게 밤낮 집에 빨리 보내라고 공문 내려 보내는 그런 짓을 3년동안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창의력 교육 하나도 안 시켜 주고는 무슨 창의력 테스트를 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일 다시 하자구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예, 내일 좀 지적해 주십시오.

○**金貞淑 委員** 그리고 교사들을 시험문제 출제위원에 넣었어야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넣었습니다.

○**金貞淑 委員** 넣기는요, 검토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는데 99명의 교수가 들어갔는데 10명이 교사고 검토위원 77명이 중·고등학교……

○**金貞淑 委員** 제가 검토위원 교사한테 들었는데 검토위원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일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교육정책개발 예산은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양성 평등교육과 여성의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貞淑 위원님께서서는 과학영재고 설립과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가를 물으시고……

○**金貞淑 委員** 그 이후는 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玄勝一 위원님께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고 관리책임 부서는 어디로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과서 문제의 관리책임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그 간의 실적, 노하우 축적, 전담 요원 확보 그리고 당해 기관의 이런 문제를 전담



하겠다는 의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기관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문원이나 국립이 있을 것이고 그 외 외교부산하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관된 KEDI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디에서 이것의 관리책임부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료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쥐고 하시는 것은 책임문제도 따르고 효력도 없으니까 전담 교수요원을 옹위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지속성이나 효과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정문원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韓完相 알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金德圭 위원님, 李在禎 위원님, 趙富英 위원님, 曹正茂 위원님, 金花中 위원님, 薛勳 위원님, 李仁基 위원님, 黃祐呂 위원님, 田溶鶴 위원님, 朴相熙 위원님, 李在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揆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음을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인 李在禎 위원님을 비롯한 黃祐呂 위원님, 金貞淑 위원님, 曹正茂 위원님, 薛勳 위원님, 金花中 위원님께서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내일 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오늘 또는 내일 회부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심의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李在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여야 총무 간에 내일 상정해서 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21일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청회와 관련해서 진술인은 각 4인으로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는 내일 오전 중에 진술인 추천명단을 행정실로 각각 4인씩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李在禎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사일정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주당쪽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우리 민주당소속 전국회의원 명의로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일단 제안이 된 이상 상정·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도저히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상정도 내일 안건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揆澤 그 문제는 내일 오전에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간에 다시 논의키로 하시지요. 사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문제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총무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의 전에 간사 간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出席委員(16人)

金 德 圭 金 貞 淑 金 花 中 朴 相 熙  
 朴 昌 達 薛 勳 李 揆 澤 李 美 卿  
 李 仁 基 李 在 五 李 在 禎 田 溶 鶴  
 趙 富 英 曹 正 茂 玄 勝 一 黃 祐 呂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장 관 韓 完 相  
 차 관 보 高 在 邦  
 기 획 관 리 실 장 李 基 雨  
 학 교 정 책 실 장 李 相 甲  
 평 생 직 업 교 육 국 장 金 京 會  
 대 학 지 원 국 장 徐 南 洙  
 교 육 차 치 지 원 국 장 金 平 洙  
 공 보 관 金 洪 鎭  
 감 사 관 李 永 燦  
 국 제 교 육 정 보 화 기 회 金 正 基  
 비 서 실 장 任 承 彬  
 총 무 과 장 白 鍾 冕

○其他參席者

학 술 원 사 무 국 장 趙 成 鍾  
 국 사 편 찬 위 원 장 李 成 茂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장 董 善 浩  
 교 원 징 계 재 심 위 원 장 車 炫 直  
 국 립 특 수 교 육 원 장 朴 慶 淑  
 유 네 스 코 한 국 위 원 회 사 무 총 장 金 麗 壽  
 대 한 교 원 공 제 회 이 사 趙 宣 濟  
 사 립 학 교 교 직 원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金 相 權  
 한 국 정 신 문 화 연 구 원 장 張 乙 炳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사 무 총 장 李 鉉 淸  
 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이 사 장 金 在 演  
 한 국 학 술 진 흥 재 단 이 사 장 金 聖 在  
 한 국 전 문 대 학 협 의 회 사 무 총 장 徐 世 鉉  
 한 국 교 육 학 술 정 보 원 장 金 榮 燦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朴 容 眩

충 북 대 학 교 병 원 장 柳 承 熙  
 사 부 국 병 장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權哲賢	教 育	産業資源	한나라당
李仁基	産業資源	教 育	한나라당

(11월10일자)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金敬天	教 育	文化觀光	새천년민주당
任鍾皙	教 育	科學技術情報通信	새천년민주당
李美卿	文化觀光	教 育	새천년민주당
朴相熙	科學技術情報通信	教 育	새천년민주당

(11월12일자)

○議案回附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정대철 의원 대표발의)

(9월11일 정대철·이부영·김부겸·권기술·안영근·신현태·윤두환·조정무·오세훈·정인봉·이주영·정의화·정재문·이연숙·이원창·고홍길·서정화·김성조·서상섭·임태희·조응규·장영달·장성민·김충조 의원 외 39인 발의)

9월13일 의장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하여 회부됨

2002년도교원인적자원부소관예산안

(정부 제출)

9월28일 회부됨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응규 의원 대표발의)

(10월18일 조응규·박원홍·김희선·김덕룡·임종석·임인배·이원형·김화중·유홍수·심재철·윤한도·이인기·서청원·황우여·김정숙·김용갑·박근혜·김중하·박상규·이원창·고홍길 의원 발의)

10월19일 회부됨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10월19일 이상희·고홍길·강창성·서정화·전용원·김찬우·신영균·윤여준·박세환·김진재·박시균·박관용·황우여·권철현·윤영탁·김정숙·김락기·최병렬·박원홍·나오연·신현태·김용균·이주영·김기춘·최병국·유홍수·김용갑·김중하·원희룡·정형근·현승일·강신성일 의원 발의)

10월20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0월25일 회부됨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10월27일 강재섭·김효석·박재욱·김원웅·김근태·박창달·이상득·백승홍·임인배·허태열·김성조·윤영탁·김학원·이해봉·엄호성·김동욱·안택수·하순봉·강숙자·박종근·신영균·이강두·목요상 의원 발의)

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하여 회부됨

○請願回附

**대구산업정보대학재단환원에관한청원**

(2001년9월10일 대구 남구 봉덕2동 1205 김재은·신진수 외 1인으로부터 權五乙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1일 회부됨

**대학모집단위광역화시정에관한청원**

(2001년9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장정규 외 124인으로부터 任鍾楫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25일 회부됨

**사립학교행정실직원교육용인터넷전용선지원에관한청원**

(2001년10월11일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223 한양대학교 시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 내 한국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협의회 회장 강명학 외 6173인으로부터 李揆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11일 회부됨

**중동및이슬람연구의활성화와대아랍홍보강화를위한지원에관한청원**

(2001년10월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2 국제아파트 2-508 전국중동이슬람관련학과교수회 대표 한덕규로부터 鄭寅鳳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25일 의장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하여 회부됨

**육영재단에대한공권력남용시정에관한청원**

(2001년11월1일 서울 광진구 능동 18-11 육영재단 이사장 박서영으로부터 河舜鳳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일 회부됨